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주권

교육의향



하정호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한밤중에 벌어진 내란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한겨울 길거리에서 은박지를 둘러싸고 돌부처처럼 앉아 있는 이들을 보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도 든다. 그런데 관저 깊숙이 숨어든 내란의 우두머리가 체포되지 않겠다고 차벽을 쌓고 철조망을 두르는 사이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 34%와 36%. 겨우 2%, 오차 범위 안의 차이이다. 무당층은 줄고 시민들은 니 편 내 편으로 갈라섰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내란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공화국의 정신과 헌법 질서를 유린해도 저쪽 사람이 대통령 되는 꼴은 못 보겠다고 한다.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여당의 지지율이 더 높아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탄핵이 끝나면 다시 대선이 다가온다. 촛불혁명 때처럼 죽 쬐서 개 줄 수는 없다. 대통령이 바뀌면 저들이 내가 바라는 사회개혁을 해줄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 비효율을 늘렸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도 미루고 고교학점제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시개혁과 같은 논란이 되는 일을 다음 정부로 미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이제 연일 쏟아지는 정치권 기사와는 거리를 두고 우리 스스로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 중앙정치와 보수양당만 바라보지 말고 분권과 자치, 시민주권의 회복을 위한 발판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는 미군정에 의해 선물처럼 주어졌다.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가 일본 군국주의를 지탱했다고 본 딴(W. F. Dean) 소장은 교육구의 설립, 교육구회의 설치,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담은 '교육자치 3법'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 제정된 '교육법'에도 이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에서 지방교육자치는 허울뿐이었고, 그마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91년에 다시 부활할 때까지 지방교육자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때까지는 교육감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우여곡절을 거쳐 2006년 이후로는 시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만으로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학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자주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2021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에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또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 교육 4주체의 학교운영 참여 등도 포괄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개념이다.

여기서 한 가지,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는 분명 "공정한 민의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이를 1997년에 '교육기본법'으로 대체하면서 이 구절이 빠지게 된 점이 아쉽다. 교육의 자주성은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시민통제의 원리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교사들은 법률이 보장하는 대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교육의 전문성은 그 과정을 잘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헌법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 우리 사회를 재생산하는 핵심기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에 근거해 시민의 교육권, 학습 기본권을 되찾아야 한다. 이제 "공정한 민의에 따라"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학교와 함께 지역교육계획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社說

'상생 발전'에 찬물 끼얹는 GGM 파업

광주형 일자리 경쟁력 지켜야

전국 1호 '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결국 파업에 들어갔다. GGM 노조 집행부 20여 명은 지난 10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합작법인 설립 5년여 만의 일이다. 노조는 파업 당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노조 간부 중심의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는 전 노조원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GGM 전체 직원은 약 690여명, 금속노조 소속 노조원은 220여명이다. 이번 파업은 법인 설립 5년 여 만, 소형SUV '캐스퍼' 양산에 나선 지 3년 4개월만이다. 앞서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월급 7.6%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3.6%를 고수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임금 인상 외에도 노조측은 노조 집행부 전임 및 노조 사무실 마련 등을 포함해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협정서는

누적 생산량 35만대 달성 때까지 상생 협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GGM 노사는 6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임금과 복지, 노조집행부 전임 문제 등에서 평행선을 그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문제는 캐스퍼 생산 차질이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비노조원과 경영진 등 모든 인력을 투입해 공장 가동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노조측의 부분파업이 전면 파업으로 전환될 시 지난해 7월부터 양산 이후 수출 길에 오른 캐스퍼 전기차 생산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GGM 노조의 파업으로 광주형 일자리 취지인 '상생 발전'은 산산이 무너졌다. 지금이라도 노사는 대화의 길로 가야한다.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근거로 대립적 노사관계를 빨리 털어내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광주형일자리는 저임금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 '경쟁력'이다. 기업 투자를 통해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만큼, 노조는 무파업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측은 노동자의 권위와 미래비전 제시를 통해 상생 일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강력 단속해야

온라인 등 상시 단속도 필요해

실 명절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1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도 지난 6일부터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등 지역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에 들어갔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사기행각에 다름 아니다. 소비자는 물론 생산농가가 입는 피해도 크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지난해 설을 맞아 농관원이 단속에 나선 결과 원산지 표시 점검 위반품목 1위는 배추김치였고, 2위와 3위는 돼지고기와 두부류로 각각 조사됐다. 원산지표시 위반 행태도 다양하다. 외국산 식재료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 산을 판매하는 행위도 많다고 한다.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배달 플랫폼 등

의 위반도 많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농·축·수산물의 유통·판매는 소비자는 물론 생산농가에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특히 소비자는 값싼 외국산 농·축·수산물을 비싸게 구입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신속한 행태가 부각된다.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릴 경우 국내 농·축·수산물의 이미지를 떨어뜨려 소비와 판매 감소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저렴한 국내산 농산물을 영광 굴비나 보성 곱파치림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해수부와 농관원, 각 자치단체는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등 온라인 판매 업소에 대한 사이버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명절 기간이 아닌 상시 단속도 제도화시켜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통업체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원산지표시는 식재료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의 급속한 확산을 부른 강풍이 또다시 예보된 가운데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타데나의 한 자동차 판매장의 차량이 '이튼 파이어' 산불로 시커멓게 그을린 채 골재만 남아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당신의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푸른색 뱀의 해를 맞은 지 벌써 12일이 지났다. 새해가 왔는데도, 새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들뜬 기분으로 연말 연시를 보냈던 예년은 온데간데 없다. 대신 거대한 혼돈과 슬픔에 잠겨있다. 언제 어디에서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공포와 불안감이 자리했다. 2024년을 떠나 보내며 너무 많은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다. 12·3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제주항공참사와 같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으며 일상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알게 됐다. 역설적으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한번 돌아보게 됐다.

미래 소비 트렌드 예측서인 '트렌드 코리아 2025'는 올해 주요 트렌드 키워드로 '아보하'를 선정했다.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이다. 너무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보통의 무난한 일상을 말한다. 특별한 성취나 과시 없이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온함을 찾으려는 삶의 태도다. 해를 넘어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할 수 없는 일상의 부조리다. '응급실 뺑뺑이'는 다반사가 됐다. 45년만의 '계엄' 선포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민민의 전당'에 난입한 무장한 계엄군을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빠졌다. 계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국민들은 '제주항공 참사'로 큰 슬픔에 잠겼다. 말로 위로할 수조차 없는 슬픔과 불안으로 밤을 지새는 날들이었다. 어느 순간에 평온했던 하루가 무너졌다.

안부 인사조차 조심스러웠던 지난 연말, 가장 많이 주고 받은 덕담은 '무탈한 한 해'였다. 무사한 한 해를 바라는 마음이 '아보하'에 녹아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 그 시간을 무탈하게 잘 보내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아보하'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위협받고 있다. 내란 선동과 법 무시, 쌓여가는 거짓말들.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평온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세상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란 노래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상이 '아보하'가 아닐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오늘이다.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